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

2022. 7. 28 (목)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온라인 생중계 **zoom** (ID: 846 9099 5450)



토론회 순서

■ 인사

10:00 - 10:05	개회사 (동물복지국회포럼)
10:05 - 10:10	환영사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 주제 발표

10:10 - 10:30	발제 동물의 법적지위와 민법개정의 의의 및 한계 조해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장
10:30 - 10:35	휴식 / 장내정리

■ 패널 토론 (좌장 : 함태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35 - 10:50	토론 1. 그 당연한 얘기가 법이 될 때 - 판례로 본 동물의 법적 지위와 변화의 필요성 김도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변호사)
10:50 - 11:05	토론 2. 민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 이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1:05 - 11:20	토론 3.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해외 동향 분석과 입법제안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11:20 - 11:35	토론 4. 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제 한민지 녹색기술센터 박사
11:35 - 12:00	종합토론 / 자유토론
12:00	정리/폐식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자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박홍근 의원입니다.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는 유체물,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동물권 인식이 확산되는 사회 분위기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동물은 물건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선언하는 「민법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 발의를 통해 국회에 회부된 지 곧 1년이 되어갑니다. 국회에서 묵묵부답이자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50,0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입법청원도 지난달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적 내용의 입법조차 제대로 심사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이 자리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선언하는 단계의 마지막 토론이 되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저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모색 국회토론회>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고찰하고, 「민법 개정안」의 내용과 의의·영향을 되짚고, 후속 입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토론회를 위해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확실히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요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제정 30주년을 맞아 동물복지의 대대적 향상을 위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올해 4월 통과시켰습니다. 원안에서 아쉽게 빠진 내용도 있었지만 동물보호법을 2배 이상 규모로 개정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개 식용 종식’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이후 사육금지처분 등 보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7월 28일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박홍근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이현승입니다.

동물의 법적 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환영하며,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박홍근 대표님, 한정애 대표님과 동물자유연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려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바뀌고 있고, 법적으로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동물을 심각하게 학대한 일부 사건들이 어렵게 공론화되더라도 일반적인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뿐이어서, 그 행위의 잔인성에 비추어보면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외의 경우 이미 80~90년대부터 법적으로 동물의 지위를 별도로 규정해온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변화된 가치관에 맞추어 개정을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법무부에서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민법에 넣을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제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민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가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에서의 뜻깊은 논의에 참여해주시는 강원대 함태성 교수님, 동물자유연대 조해인 센터장님, 김도희 변호사님, 국회입법조사처 이재영 조사관님, 어웨어 이형주대표님, 녹색기술센터 한민지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민
법 개정 과정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8일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이현승

[개 회 사]

반갑습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한정에 의원입니다.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고 계신 박홍근, 이현승 공동대표 의원님, 그리고 한준호 책임연구 의원님을 비롯한 회원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동자연 법률지원센터,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과 많은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릅니다.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엄연히 가족의 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수준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국민의 인식 변화를 고려하여 동물이 물건 취급을 받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도록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은 시대 흐름과 국민의 인식 변화를 반영해야 마땅합니다. 이제 우리도 동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생명체인 동물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나아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에게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민법 개정은 우리 법체계 전반에 동물 보호와 생명에 대한 존중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개정의 당위성을 되짚어보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부터 동물의 처우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과제 등 민법 개정을 앞둔 현시

점에서 꼭 짚어보아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쯏록,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오늘 토론회가 마련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계류되어 있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과 적극 협력하며, 후속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7월 28일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한정애

[개 회 사]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동물은 더 이상 인간의 물건이 아니다”라는 범국민적 의식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박홍근, 이현승, 한정애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동물복지국회포럼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동물자유연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등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해외 많은 선진국들은 약 20~30년 전부터 법에 동물이 생명체임을 명시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가 되어서야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했고, 이에 따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임에도 근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동물의 기본적인 권리 존중에 대한 필요성과 반려묘·견과 같이 동물을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동물복지국회포럼 책임연구원의원으로서 안타까움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 인구가 약 1,5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등 동물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룬 법안 및 정책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동물의 “권리”라는 추상적인 개념의 명문화와 동물권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고견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국회포럼의 연구책임의원이자 반려묘를 키우는 애묘인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 개정안이 사회적 공감대에 맞추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주신 관계자분들과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7월 28일

동물복지국회포럼 연구책임의원 한준호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언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사리에 맞지 않은 일을 경험할 때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곤 하는 말입니다. 누군들 이러한 경험을 한, 두 번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겠으나 동물보호 운동에 몸담고 있거나 동물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이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체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물을 한낱 물건으로 취급하다보니 소유권의 율가미가 동물학대를 당하는 동물이 소유자인 가해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는 결과를 초래하고, 가족인 반려동물이 강제집행의 압류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과 물건, 이원적 권리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민법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오랜 세월 동물을 이용해온 우리 인간 사회의 거래에서 법적 편리성을 제공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래되었다고 옳은 것이 아니며, 편리하다고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사회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는 선언적이기는 하나 동물을 비물건화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발의안이 국회로 넘어온지 10개월이 다 되는 현 시점까지도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를 처리해야할 국회는 후반기 원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공전하며 많은 지켜보는 이들을 초조하게 했습니다. 늦었지만 지난주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해 멈추었던 민법개정논의 바퀴를 다시 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은 현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해인 동물자유연대법률지원센터장님의 ‘동물의 법적지위와 민법개정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향후과제’에 대한 발제와

김도희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변호사님의 ‘판례로 본 동물의 법적 지위와 변화의 필요성’, 이재영 국회입법조사처연구원님의 ‘민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님의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해외 동향 분석과 입법제언’, 한민지 녹색기술센터 박사님의 ‘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민법개정의 필요성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땅에 살고 있는 동물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과제까지 다루는 만큼 동물의 법적지위에 있는 변화를 촉진하는 전환점이 되리라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님과 회원분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모든 구성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간을 쪼개 소중한 지혜를 나눠주신 발제 및 토론자,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함태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그 노력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생명체로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7. 28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 희 경

[환 영 사]

벌써 1년 전이 되어버린 2021. 7. 19. 무더운 여름 날, 갑자기 수 많은 기자들의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무부의 민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며, 이에 대한 법조인으로서의 견해 및 향후 변경될 입법의 방향을 묻는 기자들에게 너무도 벅찬 마음으로 이런저런 인터뷰에 응했기 때문입니다.



늘 동물과 관련된 일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걸 알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금 해하지 말자며 절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민법개정안의 입법예고 소식은 당장이라도 동물에게 제3의 법적 지위가 부여될 것 같은 희망으로 가슴이 뛰었기에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4계절을 지나 무더운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며칠 전 발생한 충격적이고도 안타까운 사건이었던 ‘울산 초등학생 개물림 사고’의 가해견은 물건으로 분류되는 현행법에 따라 압수물 폐기처분의 일환으로 안락사 논의를 가져왔고, 명백한 학대 속에 놓여있는 피학대 동물조차도 여전히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이 더 우선시되어 구조해줄 수 없는 현실의 벽에서 매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동물권의 실체입니다.

정부는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선언하였고, 이에 대해 국민 대부분은 그 변화된 시각을 지지하며 이제는 동물이 생명체로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였습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는 응당 존재하는 것이지만 단순한 기다림만으로는 결코 그 간극을 좁힐 수 없습니다.

법무부가 작년 여름 용기 있는 결단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의미있는 출발을 해준 만큼, 이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다가와 민법개정안과 그와 관련된 입법들을 조속히 제·개정해 줄 것을 기대해봅니다.

2022. 7. 28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변호사 권유림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동물자유연대법률지원센터장 조해인 변호사입니다.

"동물이 물건이라고요?" 우리 법에서 동물이 물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은 동물이 결코 물건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는 다르게 우리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적 체계와 시민들의 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은 동물을 물건으로 다루는 현 법체계가 잘못되었다고 인식하며, 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한국리서치가 올해 3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민법 개정안(‘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에 대해 응답자의 73%가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동물에게도 생명권 등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79%가 동의했으며, 동물권의 보호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41%가 찬성했습니다.

동물운동진영에서도 꾸준히 민법 제98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건과 동물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사회적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정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겠다고 민법에 제98조의2를 신설,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동물학대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가해자가 소유자인 경우 피학대 동물의 즉각적인 분리가 어렵고, 분리조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후에는 학대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하는 문제와 이로인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제한되는 현실에 좌절하곤 했습니다. 또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하거나 타인으로부터 해꼬지를 당하더라도 '물품가액'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이 민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일거에 반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는 장기적으로 '물건에 불과한' 동물을 위한 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지렛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때문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동물의 법적지위의 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후속과제를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사회에서 동물의 지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 바람처럼 민법 개정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살아가는 동물의 삶이 개선되고 나아가 '물건이 아닌 동물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통해 우리사회가 동물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대상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2. 7. 28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장 조해인

목 차

발 제

동물의 법적지위와 민법개정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향후과제
조해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장

토 론

01. 그 당연한 얘기가 법이 될 때
-판례로 본 동물의 법적 지위와 변화의 필요성
김도희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변호사

02. 민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
이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03.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해외 동향 분석과 입법제안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04. 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제
한민지 녹색기술센터 박사

•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

발제

동물의 법적지위와 민법개정의 의의 및 한계

조해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장



동물의 법적 지위와 민법개정의 의의 및 한계

조해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장

I. 민법개정 진행현황 : 민법개정(안)의 현주소

1. 법률개정 절차
2. 민법개정(안) 진행현황

II. 동물권과 법률 : 우리나라 동물의 법적 지위¹⁾

1. 동물권에 대한 다양한 태도

1) 인간의 관용(⇒ 동물의 객체성)

- 동물이라고 해서 잔인·잔혹하게 혹은 무감각하게 다루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 현행법의 기본 전제

2) 인권 향상에 도움(⇒ 수단)

- 동물권이란 인권을 확장한 개념이고,²⁾ 동물권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인권은 당연히 더욱 중시될 것이므로, 동물권을 강조하면 그 목시적인 전제로서 인권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 현행 법제 형성에 기여

3) 인간과 동등한 생명

- 모든 생명은 동등하다는 생각에서 출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1) 발제자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며, 하기 논문을 참고 - 김수진, 한국법제연구원, 2004년 11월, <동물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2) “동물권(動物權, 영어: animal rights)은 인권을 확장한 개념이며 인간동물과 같이 비인간동물 역시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지니고 있다는 개념이다.” - 위키피디아, Taylor, Angus (2009). Animals and Ethics: An Overview of the Philosophical Debate. Broadview Press, pp. 8, 19-20

많은 동물권 단체들의 입장이자 목표³⁾

○ 톰 리건(미국) : 인간과 동물이 근원적으로 평등.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⁴⁾

○ 월 킴리카(캐나다) : 동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고 주장⁵⁾

2. 동물의 법적 지위 : 물건

1) 동물 = 물건

- 매매 : 돈으로 가격이 책정되고 사거나 팔 수 있음 (vs. 장기)
- 음식 : 식재료 대상. 위생적인 도축과 유통 관리에 관심
- 의복 : 동물의 털, 가죽, 모피 등이 의복의 재료로 사용
- 실험 : 인공 장기 배양,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실험의 대상
생쥐(마우스)·들쥐(랫)·기니피그·토끼·개·햄스터·돼지·원숭이⁶⁾
- 오락 : 오락의 수단. 애완동물(?), 동물원·수족관·경마장

2) 동물에 관한 현행 법률⁷⁾

-
- 3) “동물권 옹호 단체는 동물들 역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 위키피디아, 민주주의는 목소리다 - 2부 ⑥우리에게도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 경향신문, 2017년 3월 27일
- 4) “동물권 개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미국의 철학자 톰 리건(Tom Regan)은 인간과 동물이 근원적으로 평등하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자신이 삶의 주체임을 경험하는 존재들이라는 특별한 권리인 '내재적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의 가치를 존중하는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위키피디아, 권복규 김현철, 《생명 윤리와 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년, ISBN 978-89-7300-818-6, 254쪽
- 5) “캐나다의 정치 철학자 월 킴리카(Will Kymlicka)는 그 동안의 동물권 논의가 도덕적 책무에 머물러 큰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보다 적극적인 책무와 관계적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동물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펼친다. 한국의 철학자 목광수는 킴리카의 주장과 같은 성급한 정치화는 오히려 동물권의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위키피디아, 목광수. (2013). <월 킴리카의 동물권 정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 제117집, 2013년, 173-204.
- 6) 2015년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실험동물로 가장 많이 이용된 동물 8종을순서대로 정리. - 세계일보, 2017년 3월 27일, <실험기관 전전하며 ‘돌려쓰기’... 죽음만이 안식이었다>
-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법령 검색.

- 동물보호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축산물 위생관리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III. 민법개정의 의의 및 한계

1. 판례 : 동물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

1) 재물손괴죄 vs 동물보호법 위반

- 실제 동물 학대 사례에서는 재물손괴에 대한 형량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량보다 높은 경향을 보임

2) 최근의 변화

-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

2. 민법개정의 의의 및 한계, 비판

1) 민법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98조의 2(동물의 법적 지위)</p> <p>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p> <p>②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2) 의의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취지⁸⁾
 -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⁹⁾
 - 생명 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제시되는 등 우리 사회가 동물을 포함하여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¹⁰⁾
- ⇒ 선언적인 규정이라는 하나,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의 지위상, 여러 법령의 제정, 개정 등 변화가 발생하는 계기가 되고, 장기적으로 동물권이 향상되는 효과 예상

3) 한계

- 선언적 의미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 실질적 의미는 없다는 견해 : 실질적 의미에서 현행법과 차이가 없어,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직접적, 가시적 효과 기대 불가
 -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오히려 물건으로서 현행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비판(← 법리상 이미 명문 규정이었다는 역비판)
- ⇒ 이러한 입법적 한계는 불가피한 일. 객체로서가 아닌 주체로서의 (일부라도) 권리·의무를 직접 인정하는 급격한 법률개정은 기본법으로서의 민법의 지위상 다른 법령과 충돌하는 문제, 사람의 권리·의무 및 다른 객체와 충돌하는 문제 등으로 혼란 야기할 수 있음. 향후에도 이러한 한계 내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가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 현실적.

4) 민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¹¹⁾

- 동물학대가 민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 때문이 아님.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동물공법의 영역으로서, 동물보호법 등 별도의 법률로 해결함이 타당하고 효율적. 동물의

8) 다양한 견해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많은 관계로 주로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중심으로 정리. - 법무부 보도자료, 2021년 9월 28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9) 각주 8)과 동일

10) 각주 8)과 동일

11)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Korean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하기 논문을 발제자가 요약, 정리. - 김판기, 홍진희,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 연구 제21집 제3호, 2021년 9월,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물건화는 동물사법의 영역으로서, 사람의 사적 생활관계(재산 및 신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민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민법의 적용에 있어 혼란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음.

- 동물의 비물건화를 민법에 규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내지 통념의 보편적 변화, 현행법상 동물의 개념과 유형의 명확화 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외국의 입법례에서 보듯이,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할 경우, 모순되는 여러 규정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현행 민법개정(안)대로 개정된다면, 어차피 해석상 동물은 물건처럼 취급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3. 해외 입법 사례

1)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한 사례¹²⁾

- 인도, 브라질, 스위스, 독일,¹³⁾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이집트

2) 민법에 동물권을 명시한 사례¹⁴⁾

-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 동물의 ‘감성’을 민법에 명시한 사례 : 프랑스¹⁵⁾

4. 민법개정 후 입법 과제

12)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한 7개 국가를 다수 언론보도 자료에서 확인하였지만, 독일 이외에는 발제자가 직접 논문을 통해 확인하지는 않았기에, 이를 명시함.

13) 최희수, 환경법과 정책 제19권, 2017년 9월 30일, <헌법 안에서의 동물의 위치와 국가의 의무>

14) 김판기, 홍진희,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 연구 제21집 제3호, 2021년 9월,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327-328쪽

15) 각주 14)와 동일 - 원 출처 : 오승규, “프랑스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검토”, 법과 정책연구 제15집,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5. 12, 1371면.

1) 동물보호법 개정

-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및 세분화
- 과도한 입증책임 요구하는 문언의 개정
- 임시 보호 규정의 강화 및 소유권 취득 규정의 완화
- 인허가 규정, 벌칙(과태료) 규정, 입양(사육) 제한 규정의 강화
- 동물 보호 및 구조에 있어서 정부의 행정적 권리·의무 강화

2) 다양한 규정의 신설 및 변화

- 손해배상 규정의 강화 및 다양화
- 동물에 상대로 한 압류, 가처분 등의 금지
- 동물의 물건으로서 사용함에 있어서 다양하고 강화된 제한
- 동물을 권리의 주체로서 예외적, 부분적으로 인정 : 상속제도, 신탁제도, 후견제도 등의 확대 및 다양한 변화
- 기타 사회 전반의 다양한 규정의 신설 및 변화

IV. 결어

- 민법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 목표가 아니라 수단
- 향후 민법개정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생겨나기를 기대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

•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

토론 ①

그 당연한 얘기가 법이 될 때

- 판례로 본 동물의 법적지위와 변화의 필요성

김도희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변호사



그 당연한 얘기가 법이 될 때

-판례로 본 동물의 법적지위와 변화의 필요성

김도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변호사

1. 국내 판례로 본 동물의 법적지위

가. 수의료소송에서 동물에 대한 관점 변화

민법의 통설과 판례는 물건이 손괴되었을 때 소유자가 입은 손해는 물질적 손해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물건을 상실함으로써 소유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잃은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는 추세다.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여타의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과 애정을 나누고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장애 1급의 원고가 애정과 정성으로 자신의 개를 양육해 왔는바, 이 사건 당시 원고의 개가 피고의 개에게 물려 큰 상처를 입는 장면을 직접 목격함에 따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이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반려견의 상해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법 2018나64698)"는 판결을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나. 형사소송에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관점 변화

"과거 동물에 대한 인식에는 단순히 동물을 식량, 의류를 위한 수단이나 자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데 한정되었지만 1978년 유네스코 세계동물권리선언에서는 모든 동물이 생태계에서 존재할 평등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의 평등은 개체와 종의 차이를 가리지 않으며, 모든 동물의 삶은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동물학대행위를 단순히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손괴행위로 인식할 수는 없으며, 특히 가학적, 충동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 언젠가 그

학대나 폭력행위를 사람에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단순히 동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은 과소하다고 판단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한다(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06)"는 내용으로 양형이유를 설시한 판결도 있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은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닌 객체"

법원에서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고, 법무부에서 동물을 비물건화하는 개정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은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는 것이 법의 태도다. 국내에서 동물에게 법인격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소송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국내에서 동물 법인격 소송으로 가장 유명했던 것은 2003년 천성산 지역 터널공사에 대한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사건일 것이다. 이 소송의 원고는 "도롱뇽과 친구들"이었는데, 대법원은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마1148, 1149(병합))"고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또 각하되었다. 황금박쥐, 관코박쥐, 수달, 고니, 장님굴옆새우, 안락꿍등이, 등줄굴노래기 7종의 동물 등이 "충주 가금-칠금 도로확장포장공사 구역 결정처분 등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도 "설사 원고들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 해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쇠꼬지 폐갱도 내에는 여러 개체의 황금박쥐 등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 중 어느 황금박쥐 등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지 특정되지도 아니하고, 그 황금박쥐 등이 위 쇠꼬지 폐갱도 내의 황금박쥐 중 전부를 대표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청주지법 2007구합 1212)"고 하였다. 다만, 재판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이 멸종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천연기념물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이상 누군가는 사법부에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한다고 하면서 "누구에게 어떠한 조건 아래 이를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서 자연물(동물)이 소송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설악산에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천연보호구역의 현상변경을 허가하자,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처분취소를 구하기 위해 산양 28마리가 후견인 박모씨와 함께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재판의 쟁점은 자연물인 동물이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는지였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자기 이름으로 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상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하기 때문에 동물을 원고로 인정할 수 없다(서울행법 2018구합2230)"고 함으로써 산양의 피후견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였다.

2. 외국 판결로 본 동물의 법적지위

1993년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과학자와 활동가들이 "대형유인원프로젝트 Great Ape Project"을 발족하고, 대형 영장류에 대해 생명권과 자유권, 물리적 가학 행위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제시했다. 30년 뒤인 2013년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물원에서 20년을 갇혀 지낸 오랑우탄 "샌드라"에 대해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했고, 재판관 전원은 "(샌드라가) 비인간인격체로서 일정을 기본권을 가지며, 그 중에는 자유를 누릴 권리, 억류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는 데 동의하고 그녀를 보호구역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2016년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물원은 "이러한 억류 상황이 동물들에게 굴욕적"이라고 선언하며 완전히 폐장되었다. 다만, 이 때의 권리는 "인간에 의해 잔혹행위를 당했을 때로 한정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그러나 2016년 멘도사 동물원에서 20년을 갇혀 지낸 침팬지 "세실리아"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는 "(세실리아를) 6개월 내에 침팬지 보호구역을 옮길 것을 명령했고,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는 것은 옳은 기준이 아니"라고 결론내면서 동물을 보편적인 차원에서 비인간인격체로 확인하였다. 멘도사주 법원은 "이는 동물에게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 있고, 지각하는 존재로서 법인격을 가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종에 적합한 환경에서 나고 살고 자라고 죽을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느냐의 문제다"라고 설시하였다. 이후에도 보호소의 곰 "추초"를 동물원으로 보낸 데 대한 취소를 구하며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졌다.

미국에서도 최근 해외 소송의 이해관계인interested person으로서 하마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법인격을 인정하는 물꼬를 트고 있다. 미국의 동물법률보호기금ALDF은 오하이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동물을 "법적 인격체"legal person로 인정했다. 그 동물은 콜롬비아 마그달레나강 유역에 거주하는 하마들이다. 하마들은 콜롬비아의 악명 높았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개인 동물원에 들여왔던 하마 4마리의 후손이다. 에스코바르가 1993년에 사살된 후 정부에 몰수되었는데 탈출해 마그달레나 강 유역에 정착해 80명까지 늘어났다. 콜롬비아는 이 하마들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 우려로 개체 수 조절 방안을 모색해왔다. 콜롬비아 생태학자들은 "마그달레나강에는 하마를 위협하는 상위포식자가 없다"며 "토착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마의 똥이 물속에 용해된 산소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토착 어류가 폐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하마들이 민가에 출몰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잦아지

는 추세다. 이전에도 혹시 모를 하마의 살처분을 막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콜롬비아에선 동물들을 법인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번 소송의 원고가 하마가 됐다. 하마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이 소송과 관련해 미국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야생동물 전문가 2명의 진술 청취를 오하이오주 법원에 요구했다. 미국은 해외 소송의 "이해관계인"interested person이 미국 내 진술 녹취를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미 법원의 결정이 하마를 법적 인격체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민법개정에 따른 동물의 법적지위 개선 그리고 장기적 과제

동물의 비물건화를 규정한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서구권의 국가들은, 그러면서도 하나같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는 유보적 단서를 고수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그나마 처우가 개선될 동물은 (누군가 보호자가 있는)반려동물에 그칠 확률이 높다는 점뿐만 아니라, 개별법이나 개별조항이 함께 가지 않는 한 조항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움직여야 한다. 가장 흔히 되고 있는 논의로는 민법상 손해의 범위와 손해배상청구 규정이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 교통사고 등으로 동물을 살상한 경우 가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비 등 재산적 가치를 넘는 부분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고, 보호자의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려면 민사집행법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 동물에게 상속이나 신탁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도 민법의 개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동물의 비물건화는 시작에 불과할 뿐, 일부 반려동물에 대한 일부 시혜에 그칠 수는 없다. 법적 지위, 권리능력, 당사자적격, 무엇이라 부르든 동물에게 그것을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판례는 아니지만 현재 스위스 바젤 주에서는 국민발안으로 주 헌법에 <영장류에 대한 기본권>을 추가하는 헌법개정절차가 진행중이다.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인간이 아닌 영장류의 기본권은 인간에게 부여된 기본권을 동물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동물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여 동물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있다. 더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기본권이란 우선 국가에 대한 방어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영장류의 기본권은 근본적으로 주에 대한 방어권의 의미에서 해당 주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설시한 사례가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이른바 자연물 소송이 주로 서식지 보존을 위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면, 최근

에는 보다 구체화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제주지역의 운동단체, 학자, 주민들을 중심으로 앞바다의 남방큰돌고래 100여 개체에 대한 법인격 인정 및 후견 관련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멸종위기 해양생물이며, 정부 역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지만 오늘날 해양오염과 난개발, 해양관광산업의 난립으로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후견 제도를 운용한다면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스스로 자기보호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다.

•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

토론 ②

민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

이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부제출 「민법」 개정안 관련 추가 논의 사항

이재영(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변호사)

1. 들어가는 말

동물의 지위를 고양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하여 주신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자유연대> 이하 주최측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4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으로 동물학대 등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법률 근거 마련 및 위반자 처벌 강화, 동물 관련 일정 영업의 허가제 전환, 동물실험 통제 강화 등 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으며, 지난 10월 정부가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64, 이하 ‘정부제출안’) 또한 그 취지는 인간의 전체 생태계에 대한 책임,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앞선 논의를 사법 체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제출안은 여러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관련하여 논의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하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며,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 현행 정부제출안의 한계

1) 민사법 관련

현행 정부제출안과 같은 선언적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명확한 내용이 없어 추가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적 견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관점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긍정적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선행 입법례로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를 들 수 있을 것인데, 위 국가들은 동물의 물건 지위 부정 규정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치료비 손해배상의 특칙, 압류금지 특칙을 두고 있고, 스위스는 더 나아가 동물 사상으로 인한 위자료 특칙, 유증받은 동물의 이익 고려 의무, 단기시효취득 특칙 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정부제출안이 선행 입법례의 실효적 보호 규정들을 모두 배제하고 선언적 규정만을 제출한 것은 실효적 보호 강화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2) 형사법 관련

「형법」에서는 재산에 대한 죄를 정하면서,¹⁶⁾ 대상이 되는 ‘재물’에 대한 정의(定義)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재물’ 개념은 「민법」상 ‘물건’ 개념과 일치되게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16)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 권리행사방해

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행위에 손괴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민사상 동물의 물건 지위가 부정되면 손괴죄 적용이 배제될 것으로 보아 의의를 두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¹⁷⁾ 그런데 동물에 특별한 보호를 주는 것은 현행규정 아래에서도 가능하며, 만약 동물학대를 손괴죄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물을 물건과 구분한다면, 동물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죄, 즉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장물, 권리행사방해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맺음말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한다는 큰 방향의 문제제기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행 정부제출안은 추가적인 논의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선행 입법례들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항이 마련된 것과 대비되고, 특히 스위스의 경우는 형사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현행 정부제출안에서는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행 정부제출안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동물이 「민법」상 동산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전형 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동물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가능한지, 금지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나, 영리목적 대여 금지¹⁸⁾와 같은 실효적인 보호에 대한 고민이 더욱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효적인 보호는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별도 입법에 의해 형성될 것이며, 별도 입법은 주로 형사법 및 공법에 의할 것이기에, 장기적으로 전체 법질서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보입니다.¹⁹⁾

17)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국회 통과 땐 벌금형 그친 동물학대 처벌 강화”, 경향신문, 2021. 7. 19.자; ““내가 잃은 건 가족인데”...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 연합뉴스, 2020. 8. 2.자 등.

18) 제8조제5항제3호, 제4호.

19) 최희수, 「헌법 안에서의 동물의 위치와 국가의 의무-독일 동물헌법조항의 규범적 의미를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제19호, 2017, p.20; 윤철홍, 앞의 글, p.174.

토론 ③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한 해외동향 분석과 입법제안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 및 국내 입법 방향 제안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입법과 사회적 논의는 이미 해외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최근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 따라 동물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본 글에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련한 해외 국가의 최근 입법 동향과 조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대사회의 인간과 동물 관계에 부합하면서 동물복지 향상에 실제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민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의 입법례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는 이미 해당 국가들의 민법이 개정된 지 30년에서 20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하여 여러 연구가 선행되었고, 언론, 시민단체 등을 통해 그 내용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일반민법을 개정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물건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동물에게 적용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제285조의a). 그리고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합리적인 동물 소유자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 또는 치료를 시도하는데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그 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하더라도 배상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물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했다(제1332조의a). 이후 1992년 「강제집행법」 감정적 유대가 있고 양도할 목적이 아닌 가축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했다(제250조의1).

독일은 1990년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에 대해서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규정했다(제90조의a. 동물). 그리고 “피해를 입은 동물을 치료하는 비용이 동물의 가액을 현저히 상회한다는 것만으로 그 비용지출이 과도한 것이 되지는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동물 상해에 대한 치료비 배상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제251조제2항 즉시의 금전배상). 또한 “동물의 소유자는 그 권능의 행사에 있어서 동물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제903조 소유자의 권능).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경우와 같이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사육되지 않는 동물은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스위스의 경우 2002년 민법을 개정해 “1.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2.동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제641조의a). 그리고 제482조의4에서 “동물을 유증받은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동물을 돌볼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잃어버린 동물을 발견한 사람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발견한 동물을 신고하도록 하고, 발견한 사람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의 기준을 물건의 경우 5년인데 비해 ‘가정에서 재산 증식 또는 영업적 목적 없이 기르는 동물’에 대해서는 2개월로 단축했다(제720조의a, 제722조). 그밖에 「채무추심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 개정으로 ‘가정에서 재산 증식 또는 영리 목적 없이 기르는 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추가했다(제92조제1a항).²⁰⁾

위 세 국가들의 입법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분하는 동시에 “별도의 법률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했고, 둘째로 동물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등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특칙을 마련했고, 셋째로 압류 대상에서 정서적 유대가 있는 동물 또는 영리 목적이 아닌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표 1. 국가별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비교-1

국가	원문	번역
독일	독일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BGB)	
	<p>§ 90 Begriff der Sache Sachen im Sinne des Gesetzes sind nur körperliche Gegenstände.</p> <p>§ 90a Tiere Tiere sind keine Sachen. Sie werden durch besondere Gesetze geschützt. Auf sie sind die für Sachen geltenden Vorschriften entsprechend anzuwenden, soweit nicht etwas anderes bestimmt ist.</p>	<p>제90조 물건의 개념 이 법률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만을 말한다.</p> <p>제90조의a 동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에 대하여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p>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일반민법」(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ABGB)	

20)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입법례는 지난 12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이재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민사법 규정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1.12.15.)

	<p>§ 285. Alles, was von der Person unterschieden ist, und zum Gebrauche der Menschen dient, wird im rechtlichen Sinne eine Sache genannt.</p> <p>§ 285a. Tiere sind keine Sachen; sie werden durch besondere Gesetze geschützt. Die für Sachen geltenden Vorschriften sind auf Tiere nur insoweit anzuwenden, als keine abweichenden Regelungen bestehen.</p>	<p>제280조. 사람과 구별되고 인간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을 법적인 의미에서 물건이라 한다.</p> <p>제285조의a.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물건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동물에게 적용된다.</p>
스위스	스위스 「민법」(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p>Art. 641a</p> <p>1 Tiere sind keine Sachen.</p> <p>2 Soweit für Tiere keine besonderen Regelungen bestehen, gelten für sie die auf Sachen anwendbaren Vorschriften.</p>	<p>제641조의a</p> <p>1.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p> <p>2. 동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p>

2. “동물은 ‘감응력 있는 존재(sentient being)’이다” - 최근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 동향

반면 최근 10년 동안 동물의 정의 및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위 국가들의 민법 개정 내용보다 발전된 흐름을 보인다. 위 국가들이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는데 그쳤다면, 유럽연합의 리스본 조약을 계기로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룩셈부르크 등은 민법을 개정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별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동물을 ‘감응력있는 존재(sentient being)’로 규정했다.²¹⁾²²⁾

21) 동물이 감응력있는 존재라는 것은 주변 환경을 느끼고 지각할 수 있으며 즐거움과 괴로움 같은 긍정적, 부정적 상태를 모두 경험할 수 있음을 뜻한다. Broom은 동물의 감응력에 대해 ‘느낄 수 있는 능력(capacity to have feelings)’ 외에도 자신과 관련해 다른 존재나 제3자의 행동을 감지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과의 일부를 기억하고, 위험과 이익을 감지하고, 일정 정도의 지각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다.(Broom, D.M. Sentience and Animal Welfare: new thoughts and controversies, Animal Sentience, 2016/057)

22) 2009년 발효된 리스본 조약 제13조(이후 TFEU(유럽 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제13조)는 “농업, 어업, 운송, 연구, 기술개발, 우주정책 분야에서 연합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함에 있어, 연합 및 회원국은 감응력 있는 존재로서 동물의 복지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동물의 감응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프랑스는 2015년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감응력있는 존재이다. 동물을 보호하는 법률의 유보 아래 동물은 재산 법제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제515-14조). 네덜란드는 2015년 민법 개정으로 “1)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2)사물에 관한 조항은 법령과 불문법의 규칙 및 공공질서 및 공공도덕에 기초한 제한, 의무 및 법적 원칙을 적절히 준수하면서 동물에 적용된다.”고 규정했다(Book 3 Property law in General, Article 2a). 벨기에는 2020년 민법을 개정해 “1)자연적이던 인공적이던, 물질적이던 비물질적이던 물건은 동물과 구별된다. 물건과 동물은 사람과 다르다, 2)동물은 감응력이 있고 생물학적 요구(biological needs)가 있다. 유형의 사물과 관련된 조항은 동물과 공공질서를 보호하는 법률 및 규제 조항에 따라 동물에 적용된다”고 규정했다(제3.38조, 제3.39조).

포르투갈은 2017년 민법을 개정했는데, 개정 당시 ‘동물의 감응력과 지각력에 관한 과학적 발견과 타 국가들이 법률을 개정하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함’을 입법 목적으로 밝힌 바 있다.²³⁾ 포르투갈은 민법 개정 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분하는 몇 조항을 추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물에 관련한 조항 중 일부를 통합해 별도의 관(subtitle)을 구성하는 등 전체적인 구조를 정비하였다.²⁴⁾ 먼저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동물은 ‘감응력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이며, 그 본성상 법의 보호를 받는다. 동물은 민법 및 동물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제201-B조, 제201-C조, 제201-D조). 포르투갈 민법 개정안에서 주목하여야 할 조문은 동물의 소유권에 대한 조항인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에 의해 부과된 제한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사용, 향유 및 처분권을 완전하고 배타적인 방식으로 향유한다”고 명시한 제1305조 ‘물건에 대한 소유권’ 조항 아래 제1305.a조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신설해 “1)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고 각 종의 특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동안 필요 시 동물의 번식(breeding), 출산(reproduction), 사육, 보호에 관한 규정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앞 조항의 규정 목적상 동물의 복지는 다음을 포함한다. (i)종의 필요에 따른 물과 음식에 대한 접근 보장 (ii)법에 규정된 예방 조치, 식별 및 예방접종을 포함하여 필요시 수의학적 보살핌에 대한 접근. 3)동물에 대한 재산권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고통, 괴로움, 또는 부당하게 괴롭게 하거나 유기, 죽음을 초래하는 어떤 유형의 학대에 대한 가능성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는 물건과는 달리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의 이익을 고려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점, 그리고

4) Mendonça, H., Recognising Sentience in the Portuguese Civil Code, Le web center de los animales con derecho, 2017.6.

24) 포르투갈 법률정보웹사이트,

<<https://dre.pt/dre/legislacao-consolidada/decreto-lei/1966-34509075>> (2022.7.25.최종접속)

물과 음식, 수의학적 예방과 관리,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의 보호 등 동물복지를 위해 제공해야 할 요소를 비교적 상세히 열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323조는 ‘잃어버린 동물이나 움직일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동물과 물건 둘 다에 대해 발견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경우 반환해야 하고, 알지 못할 경우 발견 사실을 그 가치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역 당국에 알려야 하며, 발견한 것이 동물일 경우 가능한 한 수의사를 통해 식별 수단을 확인해야 할 것, 그리고 발견 사실을 고지 또는 경고한 이후 1년 이내에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발견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며, 반환한 경우 발견자는 손해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물이 소유자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동물을 발견한 사람이 보유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제1323.1조~제1323.7조). 제493-A조 ‘동물의 상해와 죽음에 대한 배상’은 1)동물이 부상당한 경우 책임이 있는 자는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 기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동물의 소유자 또는 도움을 제공한 개인 또는 단체가 동물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고, 2)그 비용이 동물의 금전적 가치를 상회하더라도 전항에 규정된 보상은 지급되어야 하며, 3)반려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부상, 중요한 장기나 신체, 또는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하고 영구적으로 훼손되었을 경우 소유자는 496(1)조에 따라 도덕적 고통에 대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그 외 제1793-A조는 이혼 소송에서 사법당국은 반려동물은 배우자와 자녀의 이익과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여 한쪽 또는 양쪽 배우자에게 위탁된다고 규정했다.

스페인인 2021년 민법을 개정했는데, 동물의 법적 지위, 소유자 의무, 치료비의 손해 배상, 이혼 시 양육권 등에 관한 조항 외에도 야생동물, 동물의 판매에 관한 조항 등 상당한 분량의 조항을 신설했다.²⁵⁾

먼저 동물의 지위에 대해서는 “동물은 감응력을 지닌 살아있는 존재이다(Los animales son seres vivos dotados de sensibilidad./Animals are living-being endowed with sensibility). 재물과 물건에 적용되는 조항은 동물의 본성 그리고 동물보호를 위한 조항과 양립할 수 있을 때만 적용된다”는 조항을 신설해 별도의 법률 외에도 ‘동물의 본성을 충족할 것’을 재물 관련 법제 적용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했다(제333조1항). 또한 동조 제2항은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동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는 동물이 감응력을 가진 생명체로서의 가치를 존중하고, 각 종의 특성에 따른 복지well-being를 확보하며, 본 법률과 시행되는 타 법률에 따라 확립

25) GlobalAnimalLaw, Legislation Database,
<<https://www.globalanimallaw.org/database/national/spain/>> (최종접속 2022.7.26.)

된 제한을 존중하여 동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동물의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소유자가 동물에 대한 권리의 행사와 더불어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명시했다는 점, 그리고 동물의 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나 부분적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사람을 권리와 의무를 갖는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타 입법례와 차이를 보인다. 동조 제3항은 독일,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제3자에 의해 다치거나 유기된 동물의 치료 및 보살핌을 위한 비용은 제공된 한도 내에서 동물의 가치보다 높은 경우에도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4항은 “반려동물의 상해로 인해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동물의 소유자 및 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 모두는 야기된 도덕적 손상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동물의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 역시 복지의 구성 요소로 보았다는 점, 그리고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소유자에서 ‘함께 사는 사람 모두’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타 입법례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유용되거나 유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동산 또는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동물도 유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적 규범을 통해 규정된 제한과 금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러하다(제33조bis)”는 조항을 신설하고, “농장에 속한 동물 번식장, 비둘기사육장, 벌집, 양어장, 또는 이와 유사한 부화장은 소유자가 영구적인 형태로 그 일부를 구성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보존할 때 동물이 감수성이 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에 대한 배려와 동물을 보호하는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에 한해 상업적 체제 하에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Law)」의 압류의 대상에서 반려동물을 제외함과 동시에 동물 자체가 아닌 ‘동물로 인해 창출되는 수입’만 예외로 두었고, 「저당법(Mortgage Law)」에서 축산농장, 산업 또는 오락(레크리에이션) 회사에서 사육되거나 사육 예정인 동물은 모기지 연장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정서적 유대감이 있는 동물, 또는 가정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 등만 압류금지대상에서 제외한 것보다 한층 발전된 내용이다. 그리고 이혼 시 반려동물의 공동양육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사법당국은 반려동물을 배우자 중 한 명 또는 둘 다에게 맡길 수 있으며, 동물의 위탁을 받지 않은 배우자가 어떻게 동물과 시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해 동물의 소유권과 관계없이 가족구성원의 이익과 동물의 복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동물식별기록에 기록되도록 하는 등, 자녀의 공동양육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세한 규정을 마련했다(제94조). 그 외 제1484조, 1485조, 1492조, 1493조는 동물의 판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동물의 판매자는 판매 전에 동물이 부상, 질병, 또는 확연한 행동 변화를 보이는 경우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의학적 보조와 관리 의무를 위반하였을 시 구매자에게 응답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을 ‘감응력 있는 존재’로 정의하고 종 별 요구를 인정하는 입법 동향은 비유럽 국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 퀘벡주는 2015년 민법 개정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감응력있는 존재이며 생물학적 요구가 있다. 동물을 보호하는 특별법의 규정 외에도, 이 법 및 재산에 관한 다른 법의 조항이 동물에 적용된다”는 조항을 신설해,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동시에 감응력이 있고 생물학적 요구가 있는 존재로 인정했다(제898,1조).

표 2. 국가별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비교-2

국가	원문	번역
프랑스	프랑스 「민법」(Code civil)	
	<p>Livre II : Des biens et d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de la propriété</p> <p>Article 515-14</p> <p>Les animaux sont des êtres vivants doués de sensibilité. Sous réserve des lois qui les protègent, les animaux sont soumis au régime des biens.</p>	<p>제2권 : 재산과 소유권의 변동</p> <p>제515-14조</p> <p>동물은 감각이 있는 생명체이다. 동물은 이를 보호하는 법률의 유보 아래 재산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p>
네덜란드	네덜란드 「민법」(Burgerlijk Wetboek)	
	<p>Boek 3. Vermogensrecht in het algemeen</p> <p>Artikel 2a</p> <p>1. Dieren zijn geen zaken.</p> <p>2. Bepalingen met betrekking tot zaken zijn op dieren van toepassing, met in achtneming van de op wettelijke voorschriften en regels van ongeschreven recht gegronde beperkingen, verplichtingen en rechtsbeginselen, alsmede de openbare orde en de goede zeden.</p> <p>Article 2a:</p> <p>1. Animals are not things.</p> <p>2. Provisions relating to things are applicable to animals, with due observance of the limitations, obligations and legal principles based</p>	<p>제3권 재산기본법</p> <p>제2a조</p> <p>1.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p> <p>2. 사물에 관한 조항은 법령과 불문법의 규칙 및 공공질서 및 공공도덕에 기초한 제한, 의무 및 법적 원칙을 적절히 준수하면서 동물에 적용된다.</p>

	on statutory rules and rules of unwritten law, as well as of public order and public morality.	
벨기에	벨기에 「민법」(Code civil)	
	<p>Article 3.38 Les choses, naturelles ou artificielles, corporelles ou incorporelles, se distinguent des animaux. Les choses et les animaux se distinguent des personnes.</p> <p>Article 3.39 Les animaux sont doués de sensibilité et ont des besoins biologiques. Les dispositions relatives aux choses corporelles s'appliquent aux animaux, dans le respect des dispositions légales et réglementaires qui les protègent et de l'ordre public.</p>	<p>제3.38조 자연적이던 인공적이던, 물질적이던 비물질적이던 물건은 동물과 구별된다. 물건과 동물은 사람과 다르다.</p> <p>제3.39조 동물은 감응력이 있고 생물학적 요구가 있다. 유형 사물과 관련된 조항은 동물과 공공질서를 보호하는 법률 및 규제 조항에 따라 동물에 적용된다.</p>
포르투갈	포르투갈 「민법」(Código Civil)	
	<p>Artigo 201.-B Animais Os animais são seres vivos dotados de sensibilidade e objeto de proteção jurídica em virtude da sua natureza.</p> <p>Article 201.-B Animals Animals are living beings endowed with sensitivity and object of legal protection by virtue of their nature.</p>	<p>제201-B조 동물 동물은 감응력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이며, 그 본성 상 법의 보호를 받는다.</p>
스페인	스페인 「민법」(Código Civil)	
	<p>Artículo 333. 1. Los animales son seres vivos dotados de sensibilidad. Solo les será aplicable el régimen jurídico de los bienes y de las cosas en la medida en que sea compatible con su naturaleza y con las disposiciones destinadas a su protección.</p> <p>Article 333. 1. Animals are living beings endowed</p>	<p>제333조 1. 동물은 감응력을 지닌 살아있는 존재이다. 재물과 물건에 적용되는 조항은 동물의 본성 그리고 동물보호를 위한 조항과 양립할 수 있을 때만 적용된다.</p>

	with sensitivity. Only the regime will be applicable	
	of goods and of things to the extent that it is compatible with their nature and with	
	the provisions for their protection.	
카탈루니아	카탈루니아 「민법」(Civil Code)	
	Art. 511-1 (3): The animals, which are not considered as things, are under the special protection of the laws. Only apply to them the rules of good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ure. (unofficial translation)	카탈루니아 민법 제511-1조 (3)항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재물에 관련한 규정은 동물의 본성nature에 따라 적용된다.
캐나다 퀘벡주	퀘벡 「민법」(Civil Code)	
	Book 4. Property. General Provision 898.1 Animals are not things. They are sentient beings and have biological needs.	제4권 재산. 총칙 제898,1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감응력있는 존재이며 생물학적 요구가 있다. 동물을 보호하는 특별법의 규정 외에도, 이 법 및 재산에 관한 다른 법의 조항이 동물에 적용된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준주(ACT)는 민법 개정은 아니지만 2019년 동물복지법 개정으로 동물을 감응력있는 존재로 정의하고, 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며, 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복지를 보장할 인간의 의무를 규정했다.

개정된 조문은 1)동물을 감응력있는 존재로 정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감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에 명시했다는 점, 2)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 3)사람에게는 ‘돌봄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는 점, 4)동물의 정신적 복지를 신체적 복지와 병기했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의 동물복지 개념에 부합하고 동물보호법제가 가져야 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난 모범적인 조문이라고 생각한다. 개정 당시 ACT 주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의 동물복지는 동물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우리는 최초로 동물이 지각이 있으며 감정과 고통을 느낀다는 과학을 법에서 인정하였다. 이 법안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더 나은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²⁶⁾

표 3. 호주 동물복지법 개정 조문

호주 ACT 동물복지법 Animal Welfare Act 1992
<p>제4조 법의 목적(1) 이 법의 주요 목적은 다음을 인정하는 것이다.</p> <p>(a) 동물은 <u>주관적으로 주변 세계를 느끼고 지각할 수 있는 감응력있는 존재</u>이다.</p> <p>(b) 동물은 <u>내재적 가치</u>를 가지며 공감을 통해 대우받을 자격이 있으며 내재적 가치를 반영하는 삶의 질을 가지고 있다.</p> <p>(c) 사람들은 동물의 <u>신체적, 정신적 복지를 돌볼 의무</u>가 있다.</p> <p>4A. Objects of Act</p> <p>(1)The main objects of this Act are to recognise that—(a)animals are sentient beings that are able to subjectively feel and perceive the world around them; and</p> <p>(b)animals have intrinsic value and deserve to be treated with compassion and have a quality of life that reflects their intrinsic value; and</p> <p>(c)people have a duty to care for the physical and mental welfare of animals</p>

3. 시사점 및 제언

앞에서 살펴본 해외 국가들의 개정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로,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일찍이 민법 개정을 단행한 국가들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부정 표현을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동물의 비물건성을 선언하는 것을 넘어 “동물은 감응력 있는 존재이다”라는 긍정 표현을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있다. 더불어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캐나다 퀘벡주 등은 ‘동물은 종에 따른 고유의 생물학적 요구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물건뿐 아니라 식물 등 동물 외 생물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고, 나아가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까지 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독일 동물보호법에서 ‘동료 생명체(Mitgeschöpf)’나 스위스 법제에서 ‘피조물’, ‘존엄성’ 등 다소 관념적, 추상적으로 동물의 정의를 표현했다면, 동물의 감응력과 종별 요구를 인정한 것은 동물 관련 입법과 정책결정에서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동물복지 과학에서 동물의 감응력

26) ACT Government, “Bill passed to strengthen animal welfare standards”,
https://www.cmtedd.act.gov.au/open_government/inform/act_government_media_releases/chris-steel-mla-media-releases/2019/bill-passed-to-strengthen-animal-welfare-standards
 (최종접속 2022.7.26.)

에 대한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으며, 어류를 포함한 척추동물뿐 아니라 갑각류, 두족류 등 무척추동물 역시 고통, 괴로움 등 부정적 경험뿐 아니라 긍정적 상태를 경험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²⁷⁾ 감응력은 신체적 상태와 정신적 상태,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동물의 지위를 ‘감응력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은 ‘동물의 5대 자유’에 기반해 ‘불필요한 고통’을 막는데 초점을 둔 1960년대 동물보호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물이 ‘좋은 삶’, ‘살 만한 삶’을 살 수 있게 긍정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동물 복지 정책 방향성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동물의 물건성만을 부정하거나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 보장만을 추구하는 소극적 방식 대신, 물건 및 다른 생물과 동물을 구분 지을 수 있고 동물을 느끼는 존재로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후속 입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법 개정을 통해 ‘소유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독일은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있어 동물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을 준수할 것’, 스위스는 ‘동물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동물을 돌볼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 소유자가 동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동물의 이익을 고려하고, 종에 적합한 복지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별도의 법률이 없는 한 물건에 대한 법률을 따르더라도 동물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도덕, 동물의 본성에 부합할 것 등을 전제로 함을 볼 수 있다.

개인 간의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규율하는 민법에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선언적, 상징적 입법에 불과하며 동물보호에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꼭 민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동물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동물을 재산으로 보더라도, 대부분의 주법이 동물학대행위자의 피학대동물 소유권을 박탈하고 다른 동물의 소유권을 일정 기준에 의해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이 권리의 객체가 되더라도 소유자가 자유롭게 이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물건과 달리, 동물은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두고, 아울러 소유자의 ‘보호할 의무(duty of care)’ 규정을 세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법에서 동물의

27) 영국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지난해 동물복지법의 적용 대상을 두족류와 십각류로 확대하는 개정안과 ‘동물 감응력 위원회(Animal Sentience Committee)’를 구성하고 동물의 정책 설정과 집행 과정이 동물을 감응력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동물복지를 저해할 영향이 없는지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해당 개정안은 런던정경대(LSE)에 의뢰한 두족류와 십각류의 감응력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마련된 것이다.

법적 지위를 동물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일정한 의무와 위반 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람이 정서적 가치를 갖는 동물뿐 아니라 매매되는 동물, 재산적 가치를 갖는 동물이라 해도 재산이기 이전에 감응력있는 존재로서의 동물의 이익 또한 고려되어야 하는 근거 규정을 민법에 두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동물이 놓인 상황에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그리고 비록 설사 선언적 규정에 그친다고 해도 우리 사회 전반에서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인간과 동물 관계를 재설정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동물에게 물건과 구분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민법 개정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기 위한 방법이다. 이번 민법 개정이 동물이 물건 취급되면서 고통을 피해 ‘견뎌내는’ 삶 대신, 종별 습성을 충족하면서 부정적 상태를 최대한 격지 않고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살 만한 삶(Life worth living)’을 살 수 있는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토론 ④

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제

한민지 녹색기술센터 박사



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제

한민지 녹색기술센터 박사

동물보호를 이야기 할 때, 동물에 대한 카테고리는 인간이 인간 그 자체로 차별 없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부여받는 것과 달리 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이나, 또는 실험동물이나, 축산동물이나 등으로 그 보호 대상 및 방법이 달라집니다.

오늘 논의를 촉발시킨 민법개정안은 엄밀히 말하면, 보호대상이 되는 동물의 카테고리 중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당초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민법개정안을 다룸에 있어서 해당 논의의 시작은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인식과 변화를 법정책에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반려동물은 ‘유대’라는 측면에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 교류되는 정서적 특수 관계를 법으로 보호하고 인정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법개정과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반려동물에서 시작된 동물에 대한 보호논의와 동물의 법적지위의 재설정은 동물보호에 대한 해상도와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논의는 ‘반려동물’에 한정된 것임에 따라 인간에게 선택받은 동물에 대한 특별보호 또는 배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동물생명에 대한 보편적 보호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반려동물로 자란 개의 죽음에는 장례식을 열어 이를 추모하지만, 돼지나 닭의 죽음은 도축실적으로 표시되어 가격으로 환산 될 뿐이며, 양자의 차이는 생명가치의 차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선택에 따라 목적이 달리 키워진다는 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민법개정안의 논의가 반려동물에 한정된 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생명에 대한 보편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헌법에 동물보호와 동물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명시되고, 개별입법을 통해 이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먼저 언급하고 싶습니다. 당장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에 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즉각적인 동물보호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에 따라 동물보호와 동물생명에 대한 존엄성이라는 기본원칙에 입각한 개별법의 구체화와 실체법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민법개정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민법개정안의 핵심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민법 조문 그 자체가 아니라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물건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에 동물에게 부여되는 지위 및 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 후속조치가 없는 민법개정은 우리 법률의 목적조항에서 흔히 살펴볼 수 있는 “기여해야 한다”, “이바지 해야한다”등과 같은 선언적 조항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면 동물이 무엇인지, 기존의 구법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과 물건의 이분법적 법체계에서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동물을 정하고 이를 법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민법개정안은 유보규정을 두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물을 물건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동물이 물건의 지위를 완전히 탈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물의 비물건화를 논의함에 있어 국내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와 그에 필요한 표지(예: 영리목적이 아닌, 감정적 유대가 존재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금지, 치료비용 등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 유대관계에 기초한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후속입법조치로 고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보조항이 존재하는 한 이와 같은 후속입법조치만으로는 동물이 물건으로 간주될만한 사례는 불식되지 않을 것이며, 구체적인 고려 없이 유보조항을 둘 경우 동물의 비물건화를 정한 핵심조항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미 동물의 비물건화를 오래 전에 규정한 해외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권문제입니다.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동물은 유보조항에 따라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즉, 재산분할에 있어서 반려동물은 유보조항에 의거 물건으로 간주되어 원 소유자나 구매 시 높은 액수를 지불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에서는 재산분할 시 감정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유보조항을 달리 해석할만한 판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례는 다툼이 있는 내용에 대한 사후적인 판단임에 따라 동물의 비물건화를 정한 조항이 “동물 그 자체로서 법적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조항으로 기능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유보조항에 의거하여 동물이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을만한 사례들을 미리 파악하고, 해외동향 등을 종합하여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법규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상기에 언급한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금지, 치료비용 등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 유대관

계에 기초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반려동물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자의 권리와 보호 측면에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후속논의 중 하나인 정신적 손해배상은 물건과 동물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인간과 동물의 유대관계에 기한 가치 평가를 인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청구권과 손해배상액의 귀속주체가 반려인에게 존재한다는 점 등에서 반려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려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존재한다면, 반려동물을 키움에 있어 필요한 의무 또한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의무는 민사법에서는 개물림 사고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가입의무(이와 더불어 동물의 법적지위에 따른 보험가입의 종류 논의) 등이 있을 것이고, 기타 반려견에 대한 산책의무,²⁸⁾ 애니멀 호터를 방지하고 동물권의 보장을 위한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 등을 고려하여 동물권을 보장하고, 성숙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동물보호측면에서 민법개정안에 유보조항이 존재하는 이유와 우리가 동물에 대한 권리를 인간의 권리주장 때와 달리 적극적이고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동물과 인간의 이익이 늘 함께 증가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법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미래를 움직이도록 설계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담는 그릇입니다. 따라서 법 안에 동물권의 정착을 위해 거쳐야 할 많은 단계가 필요하다는 현실과 법으로 이를 포섭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와 제반사항의 고려 없이 동물권만을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도 어느 하나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하는 법익간의 형량을 통해 합리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형량이라는 관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형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익을 주장할 권리가 양측에 동일하게 분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익형량의 불공정함이나 이익을 주장할 권리가 일방에게만 주어진다면 공정한 형량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한 방향으로만 이익이 측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이 상충될 경우에 양자의 이익을 모두 대변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스위스에서는 동물변호사가, 오스트리아에서는 옴부즈만제도가, 독일에서는 동물보호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각 국가에서 동물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동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

28) 지난 2021년 독일 반려견명령(Hundeverordnung)은 소유자에게 하루에 최소 두 번, 최소 한 시간 동안의 산책의무(Gassi-Pflicht)를 규정하여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동 규정은 2022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니다. 우리가 인간중심의 법체계 근간을 흔들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적주체로 동물을 당장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민법개정안에서처럼 “물건이 아니고, 생명으로서 동물”을 인정한다면, 이에 합당한 이익형량과 이익의 관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장치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보호의 이익과 반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정책결정 또는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 해당 사건, 정책이나 입법(마취 없이 이루어지는 도살, 동물실험 등)에 대해 동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책과 입법과정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생명”과 그 “존엄성”을 어떻게 보호 및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점과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종(種)에 맞는 삶”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동물이 어떤 환경에서 동물답게 행복하게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명에 대한 진정한 보호 및 존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진정한 의미의 동물보호 및 존중은 궁극적으로 본성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과 독일의 최근 동물보호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 지능이 높고 지루한 것을 참기 어려워하는 동물인 돼지에게 장난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는 등 개별 동물에 맞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발견되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종에 맞는 동물 복지요건을 강화 및 수정하는 움직임 또한 눈여겨 볼만합니다. 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감정적인 친밀감 외에 실제 동물에게 필요한 지식측면에서 아직 인간은 동물세계와 개별 동물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또한 인간의 지식범주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새롭게 발견되는 과학적 증거를 반영하여 보호대상 및 방법을 점차 넓히고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자리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MEMO

MEMO

MEMO